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한 도전

## 1. 들어가며 :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인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가치들이 흔들리고, 그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40년 전 광주에 울려 퍼진 총성은 인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총성도 없이 백만 명 가까이 숨진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또 다른 인권의 문제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혀 새로운 인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폐되거나 묵과되어 온 인권 이야기를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 가장 굼아있던 상처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동일한 타격에도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폐업의 위기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렸습니다. 특정 지역과 소수자, 외국인 등에 대한 정체 없는 혐오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의 불균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적 팽창에 집중해 왔습니다. 끝없는 성장의 과정에서 촉발된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교란을 낳았습니다. 성장의 혜택은 권력층에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약자와 다음세대에 끝없이 전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단순히 백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비용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 치유만으로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회복력’을 지금부터 키워내야 합니다.

사회적 회복이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불합리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기본권이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 이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제이며, 진정한 뉴 노말(New Normal)입니다.

## 2. 사람 중심의 대응전략 : 지방정부,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참여

인권은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요소에 녹아있는 보편적 개념입니다. 주위의 건축물과 거리, 조례, 정책, 사회구조 모든 것에 사람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담겨야 합니다.

인권은 그 자체로 ‘일상’입니다. 직장이나 계약관계의 갑질, 폭력, 차별 모두 일상에서 잃은 인권입니다. 때문에 인권은 국가의 거창한 이슈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이슈에 더 가깝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250일 넘게, K-방역은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일상과 경제의 충격을 줄이는 ‘항체’가 되어왔습니다. K-방역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자유로운 일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봉쇄’가 아닌 ‘엄격한 방역’을 택하고 빠른 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모두 갖춘 지방정부는 그 진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초유의 위기를 촉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통제와 지시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모했습니다. 정부의 굵직한 방역지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시민에게 와 닿는 실행 아이디어를 배출했고, 이 ‘작은 정부’들이 만들어 낸 ‘작은 혁신’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중앙정부로 다시 파급되고, 수차례의 고비를 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공과 공공, 공공과 민간, 도시와 도시 간 수평적인 협력 역시 이 방역망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의료인은

헌신으로,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민·관은 물품과 인력 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나누며 거버넌스 대응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렇듯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에 초점을 둔 결과,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됐습니다.

### 3. 고양시의 사례 : 인권 기반의 코로나19 대응정책

특히 고양시의 긴밀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고양시는 2013년 조례 제정으로 인권정책의 토대를 마련했고, 2015년 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양시 행정 전반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모든 직제 중 가장 우선해 인권과 평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인권위원회와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이러한 사람 중심, 참여 중심의 조직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내적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외적으로는 의료인이 참여하는 민·관의료협의체를 가장 빠르게 구성해 견고한 투트랙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기업인, 소상공인, 종교인, 교육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수평적 참여의 발판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이러한 참여가 만들어 낸 대표적 정책입니다.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네 배로 폭증하며 보다 빠르고 안전한 검사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점, 고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민관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의료진과 다른 방문객의 감염 우려를 낮추면서 검사 시간을 5분의 1로 줄임으로써 안전성과 신속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획기적인 선별진료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문진-검사-검체 채취의 3단계 시스템을 최초로 체계화함으로써 정부의 승차진료소 표준 모델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고양 안심카는 또 다른 ‘드라이브 스루’를 낳았습니다. 드라이브 인 입시설명회,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장과 도서대출, 드라이브 인 예배까지 시민 삶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대면 생활양식을 촉발한 작고 강력한 혁신이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법에 가로막혔던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며 대화 상대가 되어 드렸습니다.

대면서비스 중단으로 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1대 1로 멘토링을 하는 ‘다-있다’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 내 ‘다문화코너’를 만들어 문화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4,200여 명에게도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농업인도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고양시 산업구조에서 자영업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최초로 음식점, 카페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해 밀집도를 낮추면서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정부보다 앞서 발표했습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한편, 전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직을 겪은 단기근로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6천 개를 마련한 고양 희망알바 사업입니다. 이는 고양시가 시민들의 긴급한 일자리수요에 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적립한 100억 원의 일자리기금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희망알바는 방역과 하천 가꾸기, 민원서비스 등에 투입됨으로써 다시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돌아오는 일종의 선순환을 낳았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혁신적 대응 방식은 ‘사유는 국제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라는 대응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 사회적 회복 : 사람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연대와 협력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위계에 따른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며, 모두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회복력’ 을 키우고, 사람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고양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사회의 책임, 개인의 사명이 어우러질 때 가능합니다. 그 해답은 사회 거버넌스 간 협력과 연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포용과 회복의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